



“방송의 사영화를 막아라” 시청자 복지 외면하는 방송정책 규탄 기자회견

방송인총연합회(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카메라기자협회 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방송촬영감독연합회 아나운서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노동조합 등 200여명은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시청자 복지 외면하는 방송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방송 사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올바른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의 구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기자회견에서는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UHDTV) 발전을 위해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발전 로드맵 비판, 명백한 케이블 MSO 및 종합편성채널 특혜인 8VSB 허용에 대한 성토가 집중적

로 이뤄졌다.

이에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딱딱한 방송기술 용어로 보이는 700MHz 대역 주파수, UHDTV, 8VSB 등은 시청자 복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정부는 저질 막말 방송을 통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특혜를 위해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재벌의 이득을 위해 700MHz 대역 주파수를 넘기는 것도 모자라 UHDTV 전락에서도 지상파 방송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동시에 최 회장은 “보편적 미디어의 생존을 위해 서라도 현 정부의 과도한 특정 진영 특혜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방송과 관련해 시청자 복지 차원으로 ‘공공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고화질 방송’, ‘고품질의 문화 콘

텐츠’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방송장악을 통해 공정·공공성은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동시에 강 위원장은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용 할당을 강하게 주장하며 “주파수 정책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공성이며, 통신과 방송 어느 쪽에 할당했을 때 시청자 복지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자본 권력이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장악하도록 허용해 방송의 사유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청자 주권을 바로 세우고 언론 노동자들의 주체성과 자존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대표는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를 침해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전제로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석은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도 “방송의 사영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특히 여당 추천 위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홍진표 방송인총연합회 회장(PD 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의 사영화 정책 중심에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시청자 복지를 무시하고 방송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동을 좌시할 수 없으며 과도한 종편특혜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진정한 보편적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추후 진행되는 모든 방송정책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또 하나의 死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송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지상파 MMS, 초읽기 돌입 유료방송은 벌써부터 ‘견제구’

지상파 MMS 실험방송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본지가 정부 및 각 방송사에 확인한 결과 이르면 12월에 지상파 MMS 실시를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의 결과물이 도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각 방송사가 지상파 MMS 실험방송을 위한 물밑교섭의 성과물로 실험방송을 전격 실시하는 셈이다. 시기는 늦어도 내년 2월이지만 한 달 앞서 실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미래부는 지상파 MMS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지상파 MMS 종합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상파 4사는 최장 3개월 동안 할당된 주파수를 활용해 실험방송을 실시하며 EBS는 MPEG-2 기술을, 나머지 지상파 3사는 MPEG-2/4 압축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당장 지상파 MMS 실험방송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자 후폭풍도 거세다. 특히 유료방송 진영에서는 최근 지상파 MMS의 기초가 2HD 형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을 문제삼아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지상파 방송사의 속성인 공공성을 담보로 한 것이며, 당초 9월에 KBS와 EBS가 2HD 기반의 지상파 MMS 발전을 선보였을때 처음 등장한 바 있다. 즉, 지상파 방송사가 2HD 기반의 지상파 MMS를 염두에 둘 경우 SD 채널 3개를 통해 다양한 공적 콘텐츠를 지원하겠다는 지상파 MMS의 기본적인 정신이 훼손된다는 주장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상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디지털 전환 이후 HD 화면이 기본적인 미디어 패러다임으로 실생활에 정착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상대적으로 저화질 SD 채널을 늘리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HD 화면 확립이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큰 대목은 아니다. HD 화면 구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충분한데다 추후 채널 구

성에 대한 변동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료방송은 2HD 기반의 지상파 MMS 수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강력한 반발 동력을 끌어가는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자원, 즉 광고문제다. 사실 유료방송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지상파 MMS 실험방송 및 추후 상용화 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에 광고가 허용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한다면 지상파 MMS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될 정도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책적 사안을 단순히 ‘자본주의적 관점’으로만 판단해 편협한 시각으로만 상황을 판단했다는 비판도 상존한다. 지상파 MMS 광고정책에 대한 문제는 자본주의적 관점이 아닌, 올바른 지상파 콘텐츠의 무료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료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그에 따른 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적인 책무에서 시작된 24시간 지상파 자율방송이 당사자에게 수익은커녕 장비소모 및 인력가동으로 꾸준한 내상을 입히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물론 방통위는 지상파 MMS에 광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본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지상파 MMS가 지상파의 방송시장 독과점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반발도 있다. 한 마디로 다채널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상파에 과도한 영향력이 집중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상파의 과도한 영향력을 경계하는 유료방송의 목소리가 의무재송신 논란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한다. 즉, CPS 과금 문제로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 유료방송은 지상파의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장하며 공적 영역의 확대를 주문했었기 때문이다.(2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기자회견문]

시청자 복지 외면하는 정부의 방송정책을 규탄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정책들은 시청자 복지를 무시하고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700MHz 방송용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기 위해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재벌에게 매각하려 하고 있으며, 케이블 MSO와 종합편성채널의 짝퉁 디지털 전환인 8VSB 방식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유료방송 특혜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서 시청자들로부터 보편적 고화질 방송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무료 보편의 지상파 방송을 말살시키고 유료방송과 통신 특혜 정책 로드맵을 세우는 저의는 무엇인가. 잘못된 방송정책으로 언제까지 시청자에게 피해를 주려하는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민영화의 탈을 쓴 사영화’에 대한 담론이 거세다. 이는 공공의 영역인 방송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가 유료방송 중심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에서 시청자를 위한 보편적 방송 플랫폼을 배제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인 방송을 사영화하려는 추악한 음모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지상파 방송 플랫폼을 무시하고 방송을 몇몇 재벌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를 파괴한 역사의 죄인으로 평가할 것이며, 시청자 복지를 포기한 든든한 재벌의 스폰서로 기억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의 사영화 정책 중심에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케이블 MSO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8VSB 허용 방침이다. 정부는 짝퉁 디지털 전환이라는 오명만 군소 케이블 PP의 퇴출, 저가 유

료방송시장의 고착화, 방송 콘텐츠 산업의 퇴보라는 합리적인 비판을 무시하고 오로지 저질, 막말방송의 주범인 종합편성채널에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무력화와 과도한 종편특혜, 가히 방송의 死대강 사업이 따로 없다.

방송 서비스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시청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유료방송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와 특혜남발을 통해 돈 내고 방송을 봐야 하는 유료방송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지상파 방송의 정책적 소외를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종편에 대한 과도한 특혜 욕망이 더해지며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더 이상 시청자 복지를 무시하고 방송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동을 좌시할 수 없으며 과도한 종편특혜를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우리는 진정한 보편적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추후 진행되는 모든 방송정책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 또 하나의 死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송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방송인총연합회(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카메라기자협회 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방송촬영감독연합회 아나운서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노동조합





사설

시청자 복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유료방송에 치유된 방송정책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정책은 대부분 시청자 복지를 무시하고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700MHz 방송을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기 위해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재벌에게 매각하려 하고 있으며, 케이블 MSO와 종합편성채널의 짝퉁 디지털 전환인 8VSB 방식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시청자 복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몇몇 기업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정치 작업에만 몰두하는 격이다. 이러한 정부의 헛발질은 고스란히 시청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방송의 사영화를 막아라

최근 방송인총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구 방송의 사영화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송 외 영역에서도 '민영화의 탈을 쓴 사영화'에 대한 담론이 거센 상황에서 공공의 영역인 방송도 사영화의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지상파 방송 플랫폼을 무시하고 방송을 몇몇 재벌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만들고 있다. 지상파 방송 말살에 따른 방송시장 전체에 대한 사영화 전략이 따로 없다.

특해도 문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의 사영화 정책 중심에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과도한 특해도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케이블 MSO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8VSB 허용 방침이다. 이는 전형적인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이자, 시청자 역차별 논란 및 콘텐츠 시장 파탄 등을 야기시키는 방송계의 시한폭탄이다.

시청자 복지는 필수사항이다

방송 서비스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시청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유료방송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와 특혜납탈을 통해 돈 내고 방송을 봐야 하는 유료방송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지상파 방송의 정책적 소외를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종편에 대한 과도한 특혜 욕망이 더해지며 상황은 파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선만 연결하면 누구나 다양한 고품질 방송을 시청하는 미래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이다.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를 부정하고 프리미엄 서비스의 측면에서 방송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심각한 패착이다. 시청자 복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이는 소소한 특정 사업자의 특혜보다 더욱 강력한 대의명분을 가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무료 서비스 ‘지상파 DMB’ 살려야

전병헌 의원 “티빙 등 N-스크린 서비스는 모두 유료”



지속적인 매출 하락으로 고사 직전에 놓인 지상파 DMB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청자 복지 차원에서 지상파 DMB를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36억 원의 광고매출을 기록했던 지상파 DMB의 올해(2013년 9월 기준) 광고매출은 8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사이에 광고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발표하며 “지상파 DMB가 위기인 것은 LTE 이후 무선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동 중에도 고화질 스트리밍 영상이 끊이지 않고 제공되는 기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0년대 초종반 ‘손 안의 TV’로 불리며 등장한 지상파 DMB는 이동 중에 TV, 동영상, 라디오, 문자방송 수신이 가능토록 만든 순수 국내 기술로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는 물론

기술 수출 기대까지 한 몸에 받았지만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면서 비슷한 서비스지만 끊김 없고 화질 좋은 N-스크린 서비스가 등장하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티빙이나 올레 TV, POOQ(푼) 등의 N-스크린 서비스는 모두 유료형 서비스라는 단점이 있지만 지상파 DMB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무료 보편의 서비스”라면서 지상파 DMB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DMB 관계자들 역시 전 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지상파 DMB 서비스가 자체가 스마트폰이 아닌 과거 피쳐폰에 최적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들이 외면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설명한 뒤 “최근 지상파 DMB가 고화질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DMB 활성화 정책이 지원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광고주협회의 조사 결과도 지상파 DMB의 잠재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때 지상파 DMB를 이용한다고 한다. 지상파 DMB가 플랫폼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앞으로 코바코는 류현진 경기나 프로야구와 같은 킬러콘텐츠 수급을 통해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DMB로 발전하더라도 지

상파 DMB가 매출 하락으로 인한 중단 없이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DMB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련 학계에서도 “지상파 DMB는 일종의 무료 보편 서비스로 활용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일본에도 지상파 DMB와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를 참고한다면 지상파 DMB 시장이 다시 한 번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지상파 DMB 업계에서는 고화질 기술 적용과 함께 지상파 DMB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면서 지상파 DMB 방송이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N-스크린 서비스 등 동일한 모바일 TV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경쟁력을 잃었는데 화질 개선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까지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지적만으로 정책 개선이 이뤄지겠느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상파 DMB는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업계의 관심은 정부의 지상파 DMB 정책적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KT 이석채 회장, 사의표명 “직원 고통 더 지켜볼 수 없어 결단”

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이석채 KT 회장이 사임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11월 3일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힌 뒤 전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직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솔로몬왕 앞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며 사의표명 배경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 회장의 사임 결정을 두고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각종 배임혐의 및 노무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던 이 회장이 친박 정치인 포섭으로 활로를 뚫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KT 위성 할당 매각 및 주파수 할당 논란 등이 ‘회장 퇴임’이라는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석채 회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건과 관련해 지난달 22일과 31일 두차례에 걸쳐 KT 사옥, 이석채 회장과 임직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 바 있다. 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KT가 스마트에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열린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지난 2일 귀국했으며, 귀국하자마자 이사회에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회장이 퇴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장 많은 전문가들은 이 회장의 사임이 그 의 함의에 대한 면죄부가 되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 회장의 사임과 별개로 실적 악화 및 배임혐의, 여기에 최근 불거진 위성 할

당 매각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 등 많은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최근 이석채 회장의 퇴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위성 할당 매각에 대한 부분은 국가 재원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회장의 조속한 퇴임과 더불어 해당 현안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회장의 후임 CEO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KT에 따르면 이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 CEO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조만간 시작되고 임시이사회가 소집돼 이 회장 사임건을 처리하면 2주 내 후임 CEO 선임을 위한 CEO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이후 위원회가 단일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후임 CEO가 선임되는 구조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영입될 경우 제2의 이석채 회장이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변수도 많다.이회법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과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방석호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전 상임위원, 윤창범 청와대 비서실 미래전략수석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KT 출신 인사 중에서는 이상훈 전 사장, 최두환 전 사장, 홍원표 전 전무(현 삼성전자 사장) 등의 이름이 후임 CEO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던 김중훈 씨를 둘러싼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최진홍 rgdsz@kobeta.com

KT, 미심쩍은 위성 매각 의혹 “위성방송도 위험”

KT가 전략 물자로 분류되는 위성을 외국 기업에 할값으로 팔아 치렀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 위성만 넘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관제소까지 팔아 넘겼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위성을 할값으로 판매하며 스카이라이프의 백업 위성인 무궁화 3호도 팔아버려 위성방송 먹통 가능성까지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기에 위성을 팔아넘긴 KT가 정부로부터 해당 위성의 주파수 대역까지 무단으로 재할당받았다는 의혹까지 겹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해당 논란의 발단은 국회였다. 10월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KT가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 위성 2호를 40억 4,000만 원, 2011년 9월 무궁화 위성 3호를 5억 3,000만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총 45억 7,000만 원을 받고 홍콩의 위성 서비스업체인 ABS에 할값으로 팔았다는 뜻이다.

유의원에 따르면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제한된 전략 물자여서 매각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KT는 이러한 정부승인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위성을 팔아버렸다. 총 4,519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무궁화 2, 3호기를 45억 원에 넘긴 것이다.

이에 KT는 이러한 내용을 즉각 반박하며 무궁화 위성 5, 6호가 기존 2, 3호기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으며 매각한

위성은 수명이 종료된 것으로 전략 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 3호기와 5, 6호가 유사한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어 활용성 측면에서도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무궁화 위성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까지 받았던 원로 과학인 정선종 우주산업연구회 고문이 CBS 라디오 ‘시사자극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KT의 반론을 재반박하며 사태는 새로운 정국을 맞이했다. 이에 정 고문은 방송에서 “무궁화 위성 3호기의 수명은 KT의 주장처럼 12년이 아니라 15년이며, 연료수명은 18년이다”고 밝혔다. 수명이 다해 매각을 했다는 KT의 주장을 위성 전문가가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정 고문은 KT가 위성을 왜 할값에 넘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위성방송 백업 위성인 무궁화 3호가 없으면 위성방송 자체에 엄청난 혼란이 올 가능성도 경고했다. 이에 정 고문은 “무궁화 위성 5호가 올라간 후에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5호가 담당하는데 반드시 방송에는 백업 채널이 있어야 한다”며 “그 역할을 무궁화 위성 3호가 해줘야 하는데 KT가 없었으므로 무궁화 위성 5호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위성방송이 완전히 (먹통이 된다)”고 밝혔다.

의혹은 또 있다. 정 고문은 KT가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 관제소도 팔았다고 폭로하며 “홍콩으로 판 무궁화 위성 3호를 용인 우리 관제소에서 관제를 하는데 그 시설도 팔았다”고 전하는 한편, “그 운영을 KT 인력이 용역으로 해주는 데 외국위성을 우리 영토에서

관제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제비 한 2, 30억씩 받을 것”이라며 정책, 법제도의 미비로 “전략 시설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고문은 위성을 매각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KT는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며 황당해 했다.

종합하자면 KT는 전략 물자로 분류되는 위성을 정부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외국에 할값으로 판매했으며, 방대한 정보가 있는 관제소까지 매각하는 한편 위성방송 불통 가능성까지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 고문에 따르면 KT가 위성의 수명까지 속여 억지로 매각을 주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분위기다. 심지어 위성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받은 사실까지 알려져 KT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다. 이에 KT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 할당 매각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한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KT는 위성 매각과 관련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4가지 법을 위반했다”며 “위성 매각은 민간 기업의 독자 업무이지만 KT는 (위성같은) 전략 물자는 수출허가를 받고 매각해야 한다. 청문 결과의 내용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이 전격 사퇴를 결심한 이석채 KT 회장에 대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솔로몬 왕 앞의 어머니 심정”(이석채 KT 회장)

❖이사회에 사의 표명 후 임직원 메일을 통해…다윗 앞의 골리앗의 심정이겠지요! 무책임한 사의 표명이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일은 없기를!

“지상파는 자리를 잡았고 종편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데 지상파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건 왜 그런가”(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1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역설의 해학을 아시는 분! 존경합니다!

(1면에 이어)그런데 지금 와서 지상파의 공적 영역 확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상파 MMS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종합하자면 유료방송은 자신들의 이윤에 부합할 때마다 지상파의 공적 책무와 독과점이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막강한 콘텐츠 역량을 기반으로 케이블 TV, 위성,IPTV등에서 막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얻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MMS로 지상파 채널이 추가되면 지상파의 독과점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개별 PP는 시장에서 도태될 우려가 크다고 밝힌 부분도 어불성설이다. CPS는 정당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지적 재산권의 개념인데다, 개별 PP의 도태를 걱정했다면 종합편성채널 특허라는 비판이 상존하는 거대 MSO의 8VSB 허용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맞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상파 MMS 실험방송은 지상파 방송의 공영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2HD 기반의 합리적인 시청자 눈높이 설정으로(지상파 4사 합의사항은 아님) 직접수신을 제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광고재원 문제가 해결되고 대중적인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의 존립을 걱정하며 보편적 미디어의 근간을 파괴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중론인 셈이다. 또 최근 수평규제의 틀 안에서 유료방송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풀리는 현상을 감안해도 지상파 MMS 실험방송은 ‘신의 한 수’로 보인다.

사실 지상파 MMS는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운용되는 플랫폼이 아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 구축이라는 대의명분을 전제로 지상파 MMS에 접근하고 있으며 시청자 복지의 당연한 틀로 여기고 있다. 지상파 MMS는 그 자체로 보편적 미디어의 미래인 셈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최철환	편집주간 김성훈
편집위원 김운중	서상원 장진영 송주호 박명석
편집장 최진홍	취재기자 백선하 이진범 김주옥
기획실 강동균	인쇄인 성진&화성프린트
주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총관 15층	
전화 02-3219-5635	팩스 02-2647-6813
트위터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방송계, 치열한 광고전쟁 돌입

지상파 중간광고부터 종편의 도약까지

10월 7일 김종국 MBC 사장과 지역 계열사 18개 사장단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같은달 29일 이경제 방통위 위원장이 '위기의 지상파, 새로운 활로의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사실상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천명하자 그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의 광고매출은 줄고 있지만 재송신 수신료, 프로그램 판매료, 지상파 계열 PP 매출 증가로 전체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데가 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수신료 현실화가 사실상 KBS의 광고를 줄이고 종합편성채널 등에 대한 특별회로 이어지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얻고 있는 종편이 지상파에 비해 무려 30배에 육박하는 광고 매출 성장곡선을 그린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광고'라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각축전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상파 MMS 등 민감한 방송기술과 관련된 경우 자칫 사업 당사자들의 눈치싸움으로 방송계 전체가 시계제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광고시장에서 가장 큰 논란은 지상파 중간광고다. 사실상 방통위에서 전격허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유료방송은 시청자

들의 반발 뒤에 숨어 사태를 관망하는 눈치지만 내심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상파 중간광고는 시청권 침해다'는 주장과 '모바일 및 다운로드 문화 등 다양한 시청행태의 변화로 중간광고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는 논리가 정면충돌하며 사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당장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방통위와 지상파 방송사가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지상파의 전체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과 광고매출의 하락을 조리있게 설명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동시에 수신료 현실화에 미치는 영향을 날카롭게 분석해야 하는 속제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시장의 포식자로 급부상한 종편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국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방송 광고시장의 파괴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10월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종편 4사의 올해(1~9월) 광고매출은 1,606억 원으로 지난 2012년 동기 대비(1,242억 원) 29.3% 성장했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매출이 같은 기간 동안 662억 원 감소해 -6%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구나 지상파 방송의 경우 올해 말 기준 방송광고 예상 매출액은 1조4,000억 원으로, 전년

(1조5,176억 원) 대비 7.7%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상파 방송은 다양한 광고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종편은 지상파 대비 현저하게 자유로운 방송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율광고 영업 및 모기업 신문사의 직간접적 지원으로 인해 종편이 방송광고 시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및 광고 포식자 종편문제, 여기에 복잡하게 얽힌 수신료 현실화와 상대적인 유료방송 광고지원 현안과 별개로 '방송광고'라는 아이템이 지상파 MMS 등과 같은 휘발성 짙은 사안과 연결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가 지상파 MMS에 대한 광고허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 이러한 빗장이 풀릴 경우 지상파의 광고매출 하락과 총매출액 증가라는 두 개의 팩트가 서로 충돌한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자칫 수신료 현실화나 기타 방송사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담론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지상파 MMS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발급 설명한 사태는 충분히 실현가능한 시나리오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미래부, KT 할당한 900MHz 대역 주파수 하향 이동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 이용자 단속은 없을 것”

과태료 논란까지 일으켰던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T에 할당한 900M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0.7MHz폭 이동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KT가 LTE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905~915MHz, 950~960MHz 대역은 LG유플러스의 LTE 주파수 대역 방향으로 0.7MHz 이동해 904.3~914.3MHz, 949.3~959.3MHz 대역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미래부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KT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KT는 무선 전화기 간섭으로 900MHz 대역 주파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부에 주파수 대역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900MHz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주변에서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전화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KT의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의 800MHz 대역과 가까이 붙어 있어 KT의 주파

수를 이동할 경우 또 다른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파수 대역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간섭 영향을 측정·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 이동폭을 확정했다. 이번 주파수 이동으로 LG유플러스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 뒤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간섭이 해소될 경우 기존 대역으로 복귀하는 등의 조건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900MHz 대역에서 쓰고 있는 무선 전화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의 주파수 사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홍보 부족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다. 조사에 따르면 10여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 중에는 내년부터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

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지난달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900MHz를 사용하는 가정용 무선 전화기 사용 종료에 대해 공지한 곳이 미래부 홈페이지 말고는 없다.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900MHz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방침이 유효한 것이냐”고 재차 확인한 뒤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900MHz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사용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되지만 일반 이용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의 제조·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만 실시하고, 일반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연스러운 교체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분석

FCC, DVB-T2기반 UHDTV 실험방송 연장 허가

미국은 UHDTV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한 이경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의 제시가 로렌워슬 상임위원을 비롯한 고위인사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UHDTV 국내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폭탄발언을 한 적이 있다. 물론 이후 해당 발언은 귀국 직후 사실상 철회되며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및 UHD 협의체 구성, 기술표준 제정 등의 결과물이 도출되기는 했지만 방통위 위원장이 했던 발언의 후폭풍은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후폭풍의 전제에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UHDTV가 실질적인 미디어 발전모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 종합하자면, 이 위원장의 당시 발언 맥락에는 ‘미국도 하지 않는 UHDTV 발전을 굳이 서둘러야 하나라는 관념이 배어난다는 뜻이다. 이러한 발언이 지금 유효하든, 유효하지 않든 말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일말의 의심마저 지워버릴 일들이 미국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FCC는 626MHz 주파수 대역(CH 40)에서 DVB-T2 기반의 UHDTV 실험방송을 전격 허가했다.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서 실시되는 이번 실험방송은 8월 2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실시했던 UHDTV 실험방송을 연장허가하며 UHDTV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FCC는 서비스 대상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Link Budget을 산정하고 모바일, 고정수신 등 다양한 전송 모드를 통한 Scalable QoS에 대한 검토는 물론 방송구역(coverage)과 서비스 영역(service contour) 매칭 기술 도출에 기존 60MHz 채널 대역기반 UHDTV 전송을 위한 OFDM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당 실험방송의 ‘주연’은 최근 타이탄 브로드캐스트 매니지먼트의 방송국을 1억1,540만

달러에 매수해 화제를 모은 싱클레어방송그룹이 맡고 있다. 이에 싱클레어방송그룹은 LDPC/BCH 코드를 적용한 새로운 OFDM 시스템(DVB-T2)의 성능을 검증하고 MIMO/MISO 시스템의 성능 검증도 동시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FCC의 UHDTV 실험방송 연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ATSC의 고향인 미국이 ATSC 3.0을 준비하는 와중에 DVB-T2 방식의 UHDTV 실험방송을 연장한 것 자체가 새롭다. 여기에 60MHz 채널 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부분도 특기할 만하다. 이는 국내 상황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답은 하나다. ATSC를 추구하는 미국이 UHDTV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 방식에 있어 DVB-T2 방식을 선택한 것은 국내 UHDTV 실험방송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KBS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지상파 UHDTV 발전 모델과도 상당부분 교집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대한민국 지상파 중심의 UHDTV 발전 모델은 세계적 조류를 착실하게 따라가고 있으며, 일정 정도 앞서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KBS의 지상파 UHDTV 실험방송이 35개국 200개 이상의 방송사 및 제조사, 네트워크 사업자와 관련 규제 기관 등의 국제적 디지털 방송 컨소시엄인 DVB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DVB-Scene 41호(2013년 3월호) 1면으로 전해진 것을 복기하면 쉽게 납득이 갈 것이다.

다음 단계도 명약관화다. UHDTV의 시대적 흐름이 하나로 모아지는 현재, 지상파 UHDTV 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가는 지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면 3차 UHDTV 시험방송이 뒤를 이어야 한다. 미국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지만, 세계의 흐름을 상기해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케이블 UHD 표준 제정

HD와 별로 다르지 않아

케이블 UHD 방송 표준이 제정되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임차식)는 케이블을 통해 HDTV 방송보다 4배 이상 향상된 화질을 제공하는 디지털 케이블 UHDTV 방송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히며 2013년 7월 세계 최초로 케이블 UHDTV 시범방송을 시작하고 상용화를 준비 중인 현 시점에서 표준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조기 상용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TTA는 이번 표준이 HEVC 코덱을 적용해 케이블 전용 채널을 통해 4K UHDTV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으로 신호 포맷, 다중화 및 시그널링 방법 등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TTA 케이블 방송 표준화 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호환 채널과 복수 채널에 기반한 케이블 UHDTV 방송 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케이블 UHD 방송 표준 제정이 전체 UHDTV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에는 전문가들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물론 해당 표준이 추후 다른 플랫폼에 비슷하게 적용되어 전체 UHD 방송 표준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본 표준이 HD에 비해 주사율 및 화소 당 비트수에 있어 커다란 차별화를 꾀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다수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표준을 보면, 해상도는 HD(1920*108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3840*2160이다. UHD 4k의 기준에 걸맞는 4배를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주사율에 있어 기존 HD가 30fps임에도 표준은 그와 같은 30fps와 60fps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과 화소 당 비트수도 기존 HD가 8bit인데 4k가 8~10bit로 선택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아쉽다. 여기에 샘플링머지 4:2:0으로 묶는 바람에 막상 화면 질감은 기존 HD에 비해 크게 향상되지 않은 모습이다.

문제는 이러한 표준이 추후 다른 미디어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야기되는 총체적인 부작용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머지 단추도 잘 꿰어진다라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당 표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형 지상파 UHDTV 발전을 선도하는 KBS의 2차 실험방송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KBS는 UHDTV 실험방송을 통해 4K 60p용 카메라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박차를 가하며, HEVC 업그레이드(HEVC[Test Model]ver 6.0 → ver 9.0 또는 HEVC 표준화 완료 버전 적용/비트 발생률이 완전히 제어되는 Encoder에서 CBR[Constant Bit Rate] 방송)와 HDMI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구현(HDMI 1.4ver은 프레임 레이트 한계로 30P까지만 지원/30P : HDMI 1.4ver 1개 → 60P : HDMI 1.4ver 2개 또는 2.0ver 1개 구현)을 목표로 했다. 또 멀티채널 오디오 확장 및 부호화(기존 오디오 스테레오에서 5.1CH 이상을 기대)와 4K 30P와 60P 상호간 전파 특성 비교 및 최소 수신 레벨 조사, 여기에 최적의 Transport Stream Bit Rate 확보를 위한 다양한 DVB-T2 전송 파라미터 조합실험도 달성한다는 복안이었으며 제작 및 송출, 송신 시스템의 정합실험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KBS는 향후 4K HEVC 디코더 업그레이드와 4K UHDTV : HDMI 1.4×2 또는 HDMI 2.0을 통한 4K UHDTV 60P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즉 UHDTV 전체의 발전을 위해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이번 실험방송을 통해 4K-UHDTV 60P의 세계최초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뜻이다. 3차 실험방송의 실사가 당장 행해져야 하는 이유다.

이진빈 jnb1001@kobeta.com

분석

유료방송 내전, 결론이 없다

법안 처리가 끝나도 ‘첩첩산중’

최근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둘러싸고 방송법 개정안과 IPTV 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케이블-IPTV-위성방송이 KT와 kKT 전선으로 고착하는가 하면 전반적인 규제완화를 각계각파 형식으로 잡아낸다는 전략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점유율 규제와 더불어 신기술 적합성과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통합 방송법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점유율 규제, 신기술 적용이라는 ‘딴한 불’을 끄자는 뜻이다.

당장의 화두는 유료방송에 각자 다른 점유율을 대입한 방송법과 IPTV 특별법의 개정 여부다. 케이블 SO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77개 방송권역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만드는 방송법 시행령 규정을 전체 유료방송 3분의 1로 대표되는 IPTV 특별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논쟁의 핵심인 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MSO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거세다. 현행 법률이 차별적-이중적 규제라는 것이

개정 추진의 동력인 셈인데, 통칭 CJ 특별법의 위험요소가 숨어있는 부분은 부담으로 꼽힌다. 해당 방송법이 개정되면 케이블 SO 사이에서 전략적인 인수합병이 벌어질 것이 뻔하고 거대 사업자 중심으로 케이블 시장 판도가 완벽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플랫폼의 콘텐츠 사업자, 즉 PP 매출제한 규제 완화도 덩달아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VSB 허용 등으로 고통받는 PP들은 이중고난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케이블 MSO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자신들의 제한을 풀어달라고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PTV도 마냥 불리한 것은 아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경쟁자인 케이블 SO의 잠재력이 상승하겠지만, 이와 함께 IPTV 특별법 개정도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IPTV 특별법에 따르면 유료방송 3분의 1제한을 받는 IPTV는 케이블 SO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이지만 권역별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IPTV도 방송법 개정안과 더불어 IPTV 특별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자, 물론

일각에서는 IPTV 개정안 중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논리도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방송법 개정안과 IPTV 특별법 개정안은 케이블-IPTV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유료방송 중심 정책 추진의 결정체이자 수평규제라는 대의명분을 세우기에도 적합한 요소인 셈이다. 여기에는 IPTV만 따로 특별법으로 분리한 태생적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각자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서로의 이권을 위해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정부가 받아서 처리하는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 모든 명분이 방송시장의 활성화라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행해진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DCSS와 같은 기술이 과연 신기술이 맞느냐는 기본적인 전제 외에도 거대 사업자 중심의 정책 추진, 더 나아가 방송의 공영성을 담보로 하는 다양한 수사학적인 요인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들이 전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무안경 3DTV, 약속의 땅? 지상파 3DTV 기점으로 ‘시선집중’

세계 방송기술의 조류가 UHDTV 발전으로 수렴되고 있지만, 아직 3DTV의 가능성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3DTV의 생존이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지만 ‘무안경’이라는 무기를 탑재한 3DTV의 역습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히 11월 9일부터 시작되는 지상파 3D 방송을 앞두고 무안경 3DTV 상용화 시기가 본격적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무안경 3DTV 기술은 상당부분 발전한 상태다. 3DTV의 단점 중 하나가 ‘안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가운 소식이다. 과거에는 3DTV를 보는 시선을 바꾸거나 시청자의 위치가 변하면 이미지 왜곡과 초점이 흐려지는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러한 단점들이 상당부분 극복된 상태다. 특히 LG전자의 무안경 3D 디스플레이는 지금도 시장에서 통할 정도로 성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역시 콘텐츠다. 3DTV 콘텐츠 자체는 활발하게 제작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 3DTV 콘텐츠를 무안경 3DTV 콘텐츠로 변환시키려면

추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3DTV 콘텐츠를 무안경 3DTV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솔루션 가격이 고가인 부분도 부담이다. 즉, 무안경 3DTV 기술력은 상당히 발전했지만 이를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및 ‘TV 스펙’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일반 시청자들이 UHDTV 등 고화질에 특화된 시청습관에 익숙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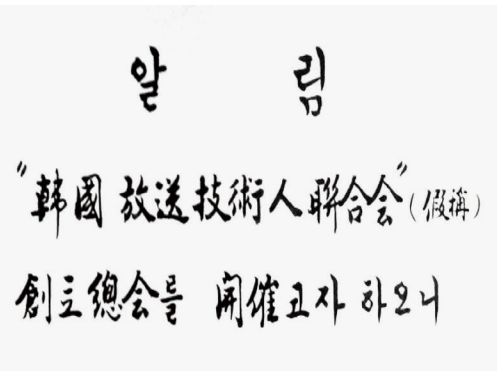
하지만 무안경 3DTV가 3DTV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물론 시장성 및 갈수록 얇아지는 디스플레이 경쟁에서 다른 플랫폼에 비해 수세가 예상되지만, 개인용 보다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무안경 3DTV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무안경 3DTV 시제품을 공개한 스카이미디어 소동수 대표는 “광고 디스플레이 경우 안경을 쓰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의 잠재력이 크다”며 “현재 몇 개 업체와 제품 공급 관련 협상 중에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KOBETA 창립 26주년 기념식 26년을 걸어온 방송기술의 역사



대한민국 방송기술의 발전과 비전을 모색하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11월 7일 오후 6시 30분 창립 26주년 기념식을 연다. 기념식에는 최동환 연합회 회장 및 각 사 연합회원과 더불어 역대 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축하



행사와 연합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추억할 수 있는 영상 시연 등이 예정되어 있다. 정식 창립 기념일은 11월 14일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987년 11월 14일 방송기술 발전을 통해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방송기술인 직능단체로 지상파를 비롯한 전국 44개 방송사 4,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를 주관하며 본지와 더불어 월간 방송과 기술을 발행하는 한편, 사단법인 방송기술교육원을 통해 대한민국 방송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주옥 kjo5554@kobeta.com

미래부-방통위 확인감사, ‘파행’

미래부 확감, 장관 말 바꾸기로 난장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가 최문기 장관의 발언 번복 논란으로 엉망이 됐다. 창조경제의 핵심 및 기타 중요한 현안들이 철저하게 무시되며 모든 이슈가 최 장관의 ‘발언 번복’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기싸움도 벌어져 국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진 국감이었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핵심 현안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 여부였다. 당초 최 장관은 14일 국감에서 통신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고는 뉘앙스를 풍긴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텐스는 확인감사에서 무너졌다. 몇몇 여당 의원들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자 최 장관도 14일 발언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최 장관은 “가능한 공개하려고 했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것까지는 아니다”라며 “소송이 가더라도 정부 입장에서 영업비밀을 공개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장 야당 의원들은 통신사와 여당, 미래부의 음모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최 장관을 압박했고 야당 의원들은 “여야 모두 통신비 인하라는 대승적인 결론에 합의했으면서 왜 통신요금 원가를 꺼리느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렸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통신사와 정부, 여당이 모종의 연대를 구축한 것 아

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자 여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동시에 KT를 겨냥한 의문도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당장 KT와 관련이 깊은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노무관리, 재정부실 등 KT에 총체적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주로 이석재 회장 취임 이후 이뤄진 무궁화 위성 대각과 관련한 의혹과 함께 대외무역법 위반 지적과 함께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장관은 KT를 둘러싼 많은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14일 진행된 미래부 국감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31일 진행된 미래부 확인감사는 최 장관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발언 번복으로 한바탕 흥역을 치르면서 모든 현안이 진흙탕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당장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 및 기타 방송용 필수 주파수, UHDTV 발전 로드맵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모조리 실종된 셈이다.

방통위 확감, 부실중편과 불법 보조금 블랙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는 부실종합편성채널과 불법 보조금 논란, 여기에 지상파 중간광고 및 700MHz 대역 주파수 현안까지 겹치며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다. 우선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는 해당 주파수

중편 ‘꼼수 편성’ 더 이상 안돼

방통위, 애니메이션 전담반 구성 … 편성시간 제도 개선할 것



어린이용 만화 프로그램을 새벽에 집중 편성해 거센 비난을 받았던 종합편성채널이 더 이상은 이러한 ‘꼼수 편성’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니메이션 방영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애니메이션 편성제도 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로 새벽시간대에 방영되었던 중편의 애니메이션 편성시간대가 어린이들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될 전망이다. 애니메이션 관련 학계, 업계, 협회, 연구기관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올해 말까지 제

작비 지원, 평가제도 개선, 어린이 주시청시간대 편성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동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TV조선, 채널 A 등 중편의 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공개하며 “새벽시간대 어린이 프로그램은 집중 편성하고 있는데 주 시청 대상인 어린이들은 보지 말라는 편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은 어린이 프로그램인 <어린이특선다큐>를 오전 3시에 <코마버스 타요 시즌2>를 오전 4시에 각각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채널A 역시 <어린이 과학교실>을 오전 3시 30분에, <동화 속 과학탐험>을 오전 5시에, <무무와 푸푸>를 오전 5시 20분에 방송하고 있다.

노 의원은 “어린이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 이들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중편들은 약속한 사업계획서를 완전히 무시한 수준

의 할당 주체보다 그 시기를 조율하는 논쟁이 많았다. 이에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700MHz 대역 주파수 연내 할당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으며 “국민의 편익과 공공성을 위한 방안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여기서 새누리당 김용동 의원이 “통신용 배정 의견이 대다수인듯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통신용으로 700MHz를 할당했다가 UHDTV로 쓸 주파수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다”는 발언을 통해 UHDTV 및 해당 주파수 할당의 연관관계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야당 의원들의 종편을 겨냥한 십자포화도 매서웠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종잡을 수 없는 편성, 편파방송의 종결자의 줄임말이 ‘종편’이라는 말들이 있다”며 “종편이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방통위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 있어 정지권을 기점으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동시에 채널A의 자본금 출자 문제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거론되었다.

통신사 불법 보조금에 대한 담론도 거셌다. 당장 여야 의원 모두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문제를 거론하며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위원장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말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었다. 또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일정 정도 온도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었으며 이 위원장도 시청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미달의 방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방통위에 종편 재승인 심사의 엄정한 평가를 촉구했다.

종편의 이 같은 꼼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 중 하나다. 종편이 재승인 평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방송평가 항목 중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말 그대로 ‘그냥 편성만’ 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까지 TV조선과 채널A를 비롯해 JTBC와 MBN 등 종편 4사 모두 어린이 프로그램을 새벽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어린이들이 쉽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시간대인 오후 4~5시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방송법에 나온 편성 규제는 편성시간대의 기준 없이 편성비율만 제시돼 있다. 이 때문에 종편이 광고 수익이 가장 낮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새벽 시간대에 편성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에 언론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전담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한 만큼 종편의 구석 맞추기 편성 행위가 변화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단신 뉴스

2013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체육대회가 10월 26일 북한산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에 체육대회에 참석한 200여 명의 방송기술인들은 북한산 등반을 마친 후 율동놀이, 단체게임, 각 방송사 별 참가자랑을 통해 친목을 도모했다. 이어서 열린 축구경기에서는 치열한 격전 끝에 MBC 방송기술인협회가 세트 스코어 2:0으로 강호 CBS 방송기술인협회를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김환영 KBS 사장이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이하 ABU, Asian Pacific Broadcasting Union)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KBS는 김환영 사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50차 ABU총회 마지막날 회장 선거에서 회원사 대표들의 만장일치로 ABU 회장에 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BU는 1964년 7월 1일 설립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방송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제 조직으로 방송에 관한 연구 촉진과 조정, 정보 교환, 각 국가의 발전과 교육 분야에서의 방송 이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길 사장은 회장 선출 직후 가진 수락 연설에서 “아시아적 가치의 확산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디지털 시대, 방송 서비스 개선과 변화된 방송 환경을 주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KBS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회원사에게 기술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신임 ABU 회장은 앞으로 ABU의 방송 정책 수립은 물론 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기술·스포츠 교류 등 ABU 회원사 간의 협력을 더욱 증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김환영 KBS 사장이 ABU 회장에 선출됨에 따라 KBS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디어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한류의 지속적인 전파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2002년부터 5회 연속 ABU 이사기관에 선임됐고, 지난 2011년에는 김인규 전 사장이 제13대 ABU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언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한국언론인공제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언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교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과 같이 언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언론인 개인 부담과 언론사 지원,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한 기금 마련으로 퇴직연금, 대출 등 금융기능과 언론인 재교육 및 국내외 연수지원, 휴양시설 활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조합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언론인 10명 중 8명이 공제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언론인 복지를 공론화해 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중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저널리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공제회가 필요하다. 공제회의 설립은 언론인의 직업적 안전장치일 뿐 아니라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탐사와 발굴을 통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일종의 다짐”이라며 공감대 형성에 집중했다.

언론계·학계·금융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총회에서 송희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조선일보 논설주간), 송광석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경인일보 사장),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회의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김용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박중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화영 연합뉴스 정치부 부장대우 등이 이사진으로 선임됐으며, 초대 이사장으로 이철휘 서울신문 사장이 선임됐다.

이철휘 공제회 이사장은 “언론인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취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보험공제로 시작해 궁극적으로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언론인연금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회는 내년 1월부터 보험공제와 상조서비스, 언론인 복지카드 도입 등 본격

적인 사업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외에도 건강검진 할인, 휴양시설 이용, 여행,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최근 발표된 광고주 협회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TV를 시청하는 경로는 DMB가 66.9%로 1위, 이어서 tving(티빙)이 7.0%, POOQ(폭이) 5.3%로 나타난 바 있다. 실시간 라이브 시청에 있어서는 DMB가 2~3위 플랫폼과는 거의 10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일반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이동형 매체임을 알 수 있는 주요 지표이기도 하다.

이같은 실시간 TV의 강점에 더해 유무선으로 VOD를 시청하는 고객층까지 접점을 강화하는 DMB사의 약진이 돋보인다. 지상파DMB QBS(대표 김경선)는 네이버㈜와 DMB 동영상서비스 공동사업 제휴협약을 맺고 ‘QBS TV캐스트’서비스를 개설, 11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HD급 고화질의 TV 캐스트로 선보이게 되는 VOD 콘텐츠들은 현대인들을 위한 ‘앱 가이드’를 지향하는 신개념 IT 정보소 ‘호모 애플리쿠스’, 현재와 미래의 벤처인들이 경험과 희망을 나누는 신개념 멘토링 토크 콘서트 ‘QBS 벤처성공에세이’, 국내외 각 분야 성공인물을 다룬 DMB 특별 다큐 ‘QBS 성공에세이’ 등 QBS의 주요 자체제작 프로그램들이다. QBS는 금번 네이버 등 포털의 고화질 TV캐스트 서비스에도 이미 유튜브, 판도라 등 주요 동영상 플랫폼에 QBS의 VOD 채널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QBS 홈페이지(http://www.qbsi.co.kr)와 모바일 웹(http://m.qbsi.co.kr)을 기반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 창구를 통한 VOD 연계 서비스까지 활발히 진행 중으로 자사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접점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700MHz 특집] 방송용 필수 주파수를 지켜라

700MHz 대역 주파수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송 및 통신의 ‘핫 이슈’로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의 담론을 살피는 한편,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사례를 통해 광범위한 논의의 시각을 점검해본다.

“700MHz는 방송용 필수 주파수” 차세대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전략 세미나



지상파의 보편적 뉴미디어 방송 구현을 위해 700MHz 대역 방송용 필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언론정보학회는 10월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차세대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700MHz를 활용한 지상파 차세대 방송 활성화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한편, 정부에게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주파수 활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오로지 시청자 복지의 측면에서 해당 주파수의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이에 발제를 맡은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700MHz 대역은 방송용으로 활용 가능한 유일한 주파수로 지상파 방송사의 UHD-TV 등 차세대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실시를 위한 대역으로 기존 디지털 방송 주파수 대역과의 연속성, 호환성, 주파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하며 “기술적, 산업적 관점뿐 아니라 방송의 사회, 문화, 시청자의 권리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정부의 지상파 차세대 방송 도입 정책을 먼저 수립한 후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언했다. 이는 디지털 전환 및 채널재배치 이후 DTV 주파수 대역이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228MHz 폭 밖에 안 된다는 현실인식을 염두에 둔 판단이다.

동시에 김 교수는 세계 방송기술의 조류인 UHD 발전을 위해서라도 콘텐츠와 플랫폼을 모두 소유한 지상파가 온전한 보편적 미디어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완전한 차세대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채널당 8MHz 대역폭이 필요하다”면서 “공익을 위해 사용할 주파수가 부족하여 공공성 실현이 포기되고, 사회적 필요에 의해 다시 주파수를 재구매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면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창 한양대 교수도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정 교수는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전체보다는 그 절반인 54MHz 폭 이라도 방송에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눈길을 끌었다. 이에 정 교수는 “KBS1, KBS2, MBC, SBS, EBS 등 채널 하나씩 6MHz를 이용하면 54MHz 폭이 필요하다”면서 “700MHz 대역폭의 108MHz 가운데 절반을 지상파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중 상하위 40MHz 폭이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 통신에 할당하기로 결정된 만큼, 현실적으로 방송이 54MHz 폭은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역으로 통신에 할당하기로 의결된 40MHz 폭의 당위성을 뿌리부터 흔들 가능성이 있다. 혼신 및 간섭의 특성을 가진 전파의 배분은 필수적으로 완충지대



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 교수의 논리는 108MHz 폭 중 상하위 40MHz 폭을 통신에 의결하기로 한 구 방통위의 결정을 일정 정도 부정하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 상태로는 전파의 혼간섭을 감안할 때 절대 계획대로 할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 교수의 방안이 방통위원장 고시로 규정되지 않은 구 방통위의 주파수 할당안을 전면 폐기하고 방송에 주파수 절반을 연속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방송인총연합회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700MHz 대역 주파수는 통신 사업자에게는 ‘몹시’이지만 방송 사업자에게는 차세대 지상파 방송을 위한 유일한 주파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회장은 “차세대 방송을 진행하게 못하게 되면 그로부터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은 통신에서 이야기하는 산업적 효과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해당 이슈가 방송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닌, 방송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이슈라는 논리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에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디지털 전환 이후 700MHz 활용방안에 있어서 정부와 통신쪽에서는 경제적 유발효과를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것은 지상파

방송의 기능을 통해 사회가 발전해 온 외부적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최선욱 연구원은 “정부와 통신 사업자들은 통신사들의 현 매출을 기준으로 사업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현 상태로 간다면 “삼성·LG전자의 TV 수상이 생산과 그에 따르는 효과들을 간과해 결국 ‘정부 실패’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당 주파수의 통신 매각에 따른 경제적 유발 효과를 강하게 부정하는 인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 박석철 SBS 전문위원은 “통신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국제적 조화(Global Harmonization)”라며 “하지만 유럽의 경우, EU표준에 따라 700MHz는 DTV용으로 쓰고 있다. 그 가운데 소수만을 차세대 모바일 통신용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주파수의 전 세계적 통신 활용 주장을 일축했으며 EBS 박병진 박사는 “지상파에 700MHz 주파수가 배정되지 않는다면 미래방송은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하며 뉴미디어 발전에 입각한 해당 주파수의 방송용 할당을 주장했다.

다만 주영호 M&C파트너 대표는 700MHz 배정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가 문화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인정적 용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지상파가 자체 콘텐츠 제작능력을 잃은 채 송출만 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주장을 펼쳤다.

최진홍 rgdsz@kobeta.com

700MHz는 통신의 전유물 아니다 스마트폰이 외면하는 700MHz 대역 주파수

국내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을 둘러싼 방송과 통신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활용을 두고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700MHz 대역 주파수는 세계적으로 대부분 통신이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미국의 주파수 활용 사례를 인용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 속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3월부터 미국 FCC는 700MHz 대역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위한 규제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쉽게 말해 700MHz 대역 주파수 전체와 호환되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인 셈이다. 하지만 FCC의 이러한 움직임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업계 1위 AT&T와 2위인 Verizon Wireless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AT&T와 Verizon Wireless의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제작하는 Apple(애플)도 8월 22일 고문 변호사 2명의 명의로 FCC의 방침을 문제가 ‘많음(problematic)’으로 표기하고 수용하

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미국은 700MHz 대역 주파수 중 70MHz 폭만 모바일 통신용으로 할당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부나 통신사들이 700MHz 대역 주파수가 ‘전 세계적 통신 Global Harmonization’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FCC는 주파수 할당에 있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Band Class 12(698~716MHz/728~746MHz) 할당의 전략적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Band Class 12는 하위 A,B,C채널(698~716MHz)과 상위 A,B,C(728~746MHz) 채널로 정의할 수 있다. 문제는 상하위 Band Class 12의 A블록이다. 하위 A블록은 강력한 전파가 운용되는 DTV 51번 채널(698MHz 이하)과 인접해 있고 상위 A블록은 바로 아래 E블록이 고출력 전파를 운용하는 곳이라 간섭 및 혼신이 엄청나게 심해졌다.

정리하자면, 700MHz 대역 주파수의 A블록은 주변 대역의 강력한 혼신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700MHz 대역 주파수의 상하위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하기로 결정했을 때 주파수 혼간섭을 고려하면 사실상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도 이러한 전파의 혼간섭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되자 FCC에 의해 A블록을 할당받은 군소 통신사들이 반발했다. 동시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파수를 할당한 FCC에 700MHz 전 대역을 대응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만들도록 강제해 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의 선두에는 Microsoft의 공동투자자인 Paul Allen가 소유한 Vulcan Wireless가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FCC는 이러한 뜻을 받아들여 700MHz 대역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위한 규제법률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업계 1위 AT&T와 2위인 Verizon Wireless는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장은 스마트폰의 선두자인

Apple의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종합하자면 ‘단말기 제조사는 그러한 강제사항을 극복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며 규제 기관의 강제조항은 반드시 기존의 700MHz 저대역지원 단말기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기존의 단말기를 변경하도록 제조사에 강제해서는 안 된다’로 정의할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은 FCC의 정책이 기존 가입자 보호에도 역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Apple은 700MHz 전대역을 커버하는 스마트폰을 거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FCC의 규제법률 제정 추진 동력의 좌초는 역설적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가 통신용 활용에 적절하지 않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물론 확대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700MHz 대역 주파수의 전 대역이 통신에 활용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은 분명 문제가 있다. Apple의 정책이 모든 통신정책의 이정표는 아니지만, 최소한 700MHz 대역 주파수의 전 세계 통신 활용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셈이다. 해당 주파수의 활용을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 미심장한 일이 벌어졌다.

최진홍 rgdsz@kobeta.com

2013 가을

디지털 방송 컨퍼런스

방송, 미래를 열다

‘2013 가을 디지털 방송 컨퍼런스’는 매년 11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2006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8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 컨퍼런스에서는 올해의 방송기술 관련 이슈를 정리하고 방송의 미래 방향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방송,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증강현실, 스마트미디어, 세컨드스크린, UHD TV 현황, 빅데이터 핵심과 같은 최신 방송통신기반 기술, ‘차세대 UHD TV 방송과 700MHz 활용 방안’에 관한 토론회 등 국내외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명 강의를 제공합니다.

일시 2013년 11월 6일(수) ~ 7일(목)

장소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

주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주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술교육원

후원 방송인총연합회, 한국방송협회, DTV KOREA, 미래방송연구회

- 사전등록 www.kobeta.com(공지사항 참조)
사전등록자 무료(자료집 포함)
- 2013년 11월 4일(월)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이메일 kobeta@naver.com
- 중식제공은 없습니다
- 사전등록자에 한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Day 1.
11/6(수)

시간	발표 주제	강사
09:30~10:00	사전등록 명단 확인, 현장등록	
10:00~10:10	개회사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10:10~10:20	Keynote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0:30~11:30	지상파 스마트플랫폼 pooq!	이상술 콘텐츠연합플랫폼(주) 이사
11:30~12:30	오디오코덱의 발전과 디지털라디오	안영기 CBS 디지털기술국 국장
12:30~13:20	점심 식사	
13:20~14:20	New MIROS - 라디오 Tapeless 제작/송출 시스템	이상규 MBC 기술연구소 차장
14:20~15:20	UHD TV 개발과 영상 콘텐츠	김병노 LG전자 TV연구소 수석연구원
15:20~15:30	Coffee Break	
15:30~17:30	토론회 : 차세대 UHD TV 방송과 700MHz 활용방안	사회 :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Day 2.
11/7(목)

시간	발표 주제	강사
09:30~10:30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방송 제작 시스템	임종근 SBS TV기술팀
10:30~11:30	미디어 가치 사슬의 변화와 수익화 실현을 위한 개방형 협업 플랫폼, Avid Everywhere	류평수 한국아비드 이사
11:30~12:30	빅데이터 기술과 비정형 영상데이터 분석	박종열 ETRI 분석SW연구실 실장
12:30~13:20	점심 식사	
13:20~14:20	HEVC 기술 & 서비스 개발 현황	류성걸 (주)픽스트리 연구개발본부장
14:20~15:20	증강현실과 방송 - 어떻게 할 것인가?	송주호 EBS 교육방송연구소 선임연구원
15:20~15:30	Coffee Break	
15:30~16:30	구글TV 사례로 본 스마트미디어 발전 방향	이건영 LG유플러스 IPTV서비스팀 팀장
16:30~17:30	방송과 통신의 하모니, 세컨드스크린 최신 기술 동향	이재호 KBS 기술연구소 차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합 방송법의 전제와 과제

통합 방송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우선 방송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듯하다. 방송법은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 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법 체계가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 2000년부터 시행된 통합 방송법이다. 통합 방송법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되었으며, 2004년 3월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방송의 정의를 조정하고, 신규 방송 서비스로 데이터방송, 멀티미디어방송의 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별정방송사업의 개념을 신설하였다. 방송법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 그 당시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과는 사정이 달라졌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뉴미디어 신기술의 도입과 그에 따른 방송환경의 구조적 변화라는 상황인식이 함축되어 있다. 게다가 법의 특성상 제한과 규제의 속성을 버릴 수 없기에 통합 방송법은 더 큰 의미의 광역화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르러 많은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고민하게 된다. 2013년 통합 방송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지난 5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주 해비치 호텔

에서 열린 '2013 디지털 케이블TV쇼' 축사에서 "정부는 방송과 스마트 미디어를 육성하고 혁신적인 방송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4년까지 방송법과 IPTV법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그는 "1995년 우리나라 뉴미디어 시대를 연 케이블 TV는 방송 산업의 경쟁과 성장을 주도하고 콘텐츠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선도했던 케이블 TV는 이제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미디어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 방송법, 굳이 통섭의 의미에서 재단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방송법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케이블 TV가 지향하는 스마트 미디어가 방송 분야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기술개발, 표준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체 간 칸막이식 규제를 개선하고, 내년까지 방송법과 IPTV법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합 방송법은 DCS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N-스크린이 출현한 단계에서 등장했어야 하는 논리다. TV와 같은 실시간 채널과 주문형비디오(VOD)를 동시에 제공하는 하

이브리드 서비스인 CJ헬로비전의 티빙이 2013년 8월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 논의되고 결과가 도출되었어야 했다. 또 현대HCN과 판도라TV가 합작으로 설립한 N-스크린 서비스 에브리온TV도 애플리케이션 누적 다운로드 260만건과 하루 순방문자 수 10만건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SK플래닛의 모바일 VOD에 특화된 N-스크린 서비스인 호핀은 출시 2년6개월 만에 가입자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모든 것들이 통합 방송법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호기를 놓쳤고, 다양한 규제에서 그 기회마저 놓아버렸다.

물론 전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 방송법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해야 하는 일종의 아이템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싶은 것 뿐이다. 방송정책이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상황을 단박에 타개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통합 방송법의 제정이라고 굳게 믿는다. 다만 한 가지 길을 열어두자면,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경우 현실적으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만이라도 통합

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치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현행 방송법상 아날로그 방송 개념에 VOD와 같은 공간 편성을 하는 사업자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조적인 뉴미디어 발전을 위한 각자의 영역을 담보한다면 통합 방송법의 길은 더욱 활짝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통합 방송법 자체는 이미 실존하는 관념의 법률로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새로운 기술의 가면을 쓴 기존 기술의 법리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통합 방송법 논의는 분명히 일리 있는 논리라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합 방송법의 제정이 수평규제의 논리에서 정당성 있는 법안으로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특혜와 유료방송 중심의 근거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지난 10월 29일 방송인총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및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방송인들은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는 통합 방송법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정 법안의 처리가 일부 방송의 이기심에 몰들어서는 곤란하다.

표류하는 재난망 사업, 문제는?

2002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국가 재난망 사업은, 2003년부터 당시 정보통신부가 주파수 공용 통신인 '테트라'로 선정할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사업비 과다 지출 가능성을 경계한 감사원의 지적으로 뼈격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워지는 사업이 되고 있다. 와이브로 기술과 그에 따른 보조망 사업,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과도 연결된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까.

그런데 2013년 현재, 국가 재난망 사업은 또 물 건너 갈 위기에 몰렸다. 당장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도 기약이 없었다. 박남춘 의원(민주당)이 국감 직전 보도자료에서 "재난망 사업 지연으로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별도 예산으로 교체한 무전기 예산만 470억 원에 이른다"며 현재 낭비를 언급한 것이 유일한 재난망 관련 지적이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재난망 사업을 완전히 망각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무대는 무엇일까, 그 주체가 무엇이고 객체는 또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하는 일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예비 타당성 결과 발표가 몇 달째 미뤄지고 있는 가

운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재난망은 통신망 개념이 강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내놔 주목을 끈다. 당초 지난 6월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재난망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는 내달까지 미뤄진 상태인데다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정부 부처의 이관 논치다툼이 벌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난망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으로 안행부는 11월 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지만, 과연 이러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부호가 달린다.

물론 재난망 사업은 안행부의 지적대로 통신망의 현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관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는 가정이면, 700MHz 대역 주파수의 와이브로 보조망에 대한 논란도 순식간에 끝날 것이다. 하지만 안행부의 본질이 이러한 이관 움직임을 잡아 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과학의 영역으로 돌려 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철학의 큰 방향을 창조경제로 몰아간 현 정부의 의식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본다. 요약하자면, 재난망 사업을 하나의 사업 구조로만 재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난망 사업은 하나의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사업, 즉 비즈니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적인 성격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감사원의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기술적 논의는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또 재난망이 미뤄지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 과연 재난망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도 문제라고 본다.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사태의 책임을 누군가 반드시 져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재난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테트라니, 와이브로니 하는 방식의 차이와 더불어 국가 주무연구기관의 성의없는 태도는 재난망 사업의 타당성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라고 생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정 일 용 ICT연구발전소 상임대표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는데, 10장으로 나뉜 전문 8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재난망은 이러한 법제화의 화룡정점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이에 따라 안전관리의 총괄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제9·10조), 지역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재난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근본적인 이유다.

재난망은 필요에 의해 마음대로 구축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통합 재난망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재원의 성격인 주파수를 맹목적으로 대입하면 재난망 구축은 요원할 뿐이다. 당장 현실적이고 활용가능한 주파수 대역에서 선제적인 국가 재난망 구축을 기대해본다.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 R O A D C A S T I N G & T E C H N O L O G 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장비, 음향기기전)전시회 무료
-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SONY
make.believe

Optical Disc Archive를 활용한 소형 콘텐츠 아카이브 라이브러리 ODS-L10



ODS-L10
Optical Disc Archive 10 slot library

ODS-L10 합리적인 비용으로 네트워크 기반 선반 아카이빙 구현

- 10장의 카트리지 및 2대의 드라이브(ODS-D55U) 내장 가능
- 내장된 Robotic arm으로 자동화된 아카이브 시스템 구현
- 아카이브/리트리브 파일을 관리하는 File Manager 어플리케이션 제공
- Web service API 기반으로 미들웨어 없이 기존 MAM 솔루션과 연동
- 빠른 파일 접근성으로 중형 용량의 콘텐츠에 더욱 신속하게 접근



Optical Disc Archive Cartridges

모 델	용 량	설 명
ODC-300R	300GB	SL Write Once
ODC-300RE	300GB	SL Re-Writable
ODC-600R	600GB	DL Write Once
ODC-600RE	600GB	DL Re-Writable
ODC-1200RE	1.2TB	TL Re-Writable
ODC-1500R	1.5TB	QL Write Once

Sony Korea Corp. Professional Solutions Division Company

■ 제품정보 : <http://bp.sony.co.kr> ■ 기술지원 : (국번없이)1588-7313 <http://bpeng.sony.co.kr>
 ■ 대 리 점 : 서울 • 인터아이코리아(주): (02)3471-1515 • (주)베스코에스아이: (02)716-9722 • (주)지엘에스: (02)2165-8777 • (주)캐스트정보: (02)3453-5148 • (주)한국에릭스: (02)322-3264
 부산 • 인터아이코리아(주)부산지점: (051)518-4068 • (주)아이엘비테크: (051)257-7087 • 제니스디지털: (051)638-2210 / 대구 • (주)진명아이앤씨: (053)426-6900 / 광주 • (주)수창미디어: (062)654-2500 / 대전 • 인터아이코리아(주)대전지점: (042)862-4472
 ■ A/S센터 : (주)창텍엔지니어링: (02)784-9912 부산지사: (051)861-5866 • (주)시오인포: (02)786-0433 울산지점: (02)718-0434 • (주)나스텍: (02)780-3040 • 포델: (02)761-9577



Optical Disc Archive